

농업계 동향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필요

한·EU 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지리적 표시제의 활성화와 특정 품목에 대한 도입 논의가 고조되고 있다. 포도주와 위스키를 제외하고도 720여 품목에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는 유럽연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품목은 7월 11일 현재 33개에 그쳐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김치에 대해서도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규정상 재료의 상당 부분을 수입산을 사용하더라도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김치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리적 표시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지리적 표시제 관리 기관이 농림부와 특허청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지리적 표시제를 획득하더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이 보완점으로 떠올랐다. 또한 지명을 활용한 유사상표 등에 대한 제제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장 범위의 설정, 관할 부서 일원화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농촌경제연구원 뉴스〉

녹차 안전성관리 강화 대책 추진

시중에 현재 유통 중인 티백녹차에서 살충제 농

약인 이피엔(EPN) 잔류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녹차 및 녹차음료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현미녹차 원료의 대부분이 저율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차 조제품으로 수입되고 있어 국내 녹차 생산 농가의 피해가 크다.

이로 인해 국내 및 수입 녹차원료의 안전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어 정부는 녹차 안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과 녹차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녹차주산지를 대상으로 농약사용실태를 조사하였고, 수입산의 원산지 둔갑표시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도 추진하였다. 또한 원료 차잎에 대한 농약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농약성분 잔류 여부를 추적·조사할 예정이다. 국내 녹차 재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녹차 잎을 채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산 녹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리적 표시등록을 마친 보성과 하동에서 생산되는 현미녹차를 홍보해야 한다. 또한 국산 녹차의 친환경 재배 유도를 통한 수입품과의 차별화와 수입 녹차의 엄격한 위생검사, 별도 품목분류를 통한 차별화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농촌경제연구원 뉴스〉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

농림부는 8월 29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앞서 입법예고한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농업경영체 육성과 관련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의 조항을 삭제하여 이번 안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경영체 기준 조정 및 등록제 도입, 경영규모화 촉진과 경영이양 근거 마련,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개편, 농업법인제도 이관 및 지원 근거 등이 있다.

농업경영체의 범위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이는 경영이양직불제 근거 마련, 기존 품목별 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전환 등의 정책 방향과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법인 및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기존 농업·농촌기본법에서 해당 안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9월 27일까지 공청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17일 공청회를 마친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 대책(안)에서 예외를 인정하였지만 신규 진입 농가를 직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 법안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

올 4월에 처음 도입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는 품목등록제 또는 인증제와는 달리 자재의 효능과 성분함량은 보증하지 않고,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자재인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많은 친환경자재들이 유통되고 있으나 농가들이 이들 자재가 친환경유기농업에 적합한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미국의 비영리민간단체인 OMRI(유기농자재연구소)의 목록공시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우선 농진청 홈페이지에 1차로 공시된 17종을 게재했으며, 앞으로 공시제품수가 많

아질 경우 관보개제 또는 민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도 통보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협중앙회에도 통보해 구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목록 공시된 제품이라는 심볼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유기농산물 품질과 안전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뉴스〉

이제 임업인도 농업인 재해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 대인·대물배상 특약 신설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재해공제(농업인 안전공제·농기계 종합공제)에 그동안 가입 대상이 아니었던 임업인도 가입할 수 있으며, 농기계 종합공제에는 대인·대물배상 특약이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와, 사고로 농기계가 파손되는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 종합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가입 공제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임업인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임업인도 농협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 임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기계 종합공제는 농기계 파손이나 운송농산물과 같이 본인이 입은 손해를 주로 보상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대인·대물배상 특약을 추가하여 보장성을 강화했다.

임업인 안전공제 공제료는 53,900원이며, 이 중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6,950

원만 납부하면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임작업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임작업 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을 보상하며, 이외에도 입원시 하루 15,000원의 입원금, 100만원 한도의 치료비 등이 지급된다.

대인·대물배상 특약은 농기계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이나 타인소유 자동차에 피해를 주는 경우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특히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 대상인 6종류의 농기계 중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 3종류의 농기계만이 대상이 된다.

대인배상 특약은 5천만원 한도로서 공제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며, 대물배상 특약은 2천만원 한도와 5천만원 한도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국고 미지원 특약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임업인들은 임작업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보다 높은만큼 안전공제에 많이 가입하여 대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가입 및 문의사항은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출처: 농림부)

2007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계획 발표

- ① 43만톤(포대벼 32, 산물벼 11)을 수확기 시기로 매입하되, 우선지급금은 매입시 지난 해와 동일하게 지급(48,450원/조곡 40kg)
 - ②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매입하는 산물벼도 매입시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
 - ③ 10월초 금년 작황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별도 대책 강구
- 정부는 금년산 공공비축용 추곡매입방안을 7월

18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07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은 43.2만톤으로 하되, 그중 31.7만톤은 포대벼로, 11.5만톤은 산물벼 형태로 각각 매입하며, 금년 벼 작황 등에 따라 필요시 농협을 통한 추가매입 등 수확기 대책은 별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의 경우 미질을 고려하여 전년보다 5일을 단축(9. 20.~11. 10.)하여 RPC를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톤백 포함)는 10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800여 검사장에서 매입하도록 하였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평균 산지쌀값(80kg)을 벼(40kg)로 환산한 가격으로 하며, 포대벼와 산물벼 모두 매입시 농가에게 우선지급금을 지급한 후 산지쌀값 조사결과가 나오는 2008년 1월 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 우선지급금은 포대벼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수확기 산지시가가인 벼 40kg 가마당 48,450원(1등급기준)으로 하였으며,

- 산물벼는 포대벼 우선지급금에서 포장 제비용(670원)을 차감한 금액인 47,780원을 지급토록 하였다.

- 수확기(10~12월) 쌀값 조사결과, 우선지급금보다 쌀값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RPC를 통해 매입한 산물벼는 내년도 5월까지 시장출하를 원칙으로 하되,

- 1단계로, 내년도 2월 말일까지 매입한 당해 RPC가 자체 인수 여부를 결정하여 3~4월 중에 인수토록 하고,

- 2단계로, 당해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하여 정부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조곡을 판매(5월 중)하며,

- 3단계로, 판매 잔여물량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이고(6월 중)하여 관리하게 된다.

금년도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은 산물벼 매입기간 5일 단축, 표본추출 검사 50%확대, 시범사업인 건조산물 매입검사(톤백)를 제외하고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하여 농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부녀화로 포대벼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건조산물(톤백) 매입검사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건조산물 매입검사는 기존 건조산물 매입시설이 설치된 장소 중 8개소에서 농가가 자체 건조한 상태의 건조벼를 자동계량기로 계량한 후 기계 계측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톤백(800kg)에 담아 기존창고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이때 농가는 포장재 규격에 상관없이 건조상태의 벼만 매입장소에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는 건조산물제도를 확대하여 나갈 방침이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물벼도 포대벼와 같이 매입시 지급하고 수확기 쌀값 조사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유지하였으며, 산물벼 인수여부는 RPC가 자율 결정토록 하고, RPC가 인수를 포기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곡으로 판매하거나 정부가 보관 관리하는 방식을 유지하였다.

또한, 조기에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농업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43.2만톤을 매입할 경우 2008 양곡연도말(2008. 10말) 정부의 쌀 재고는 90만톤으로 금년 양곡연도말(97만톤)에 비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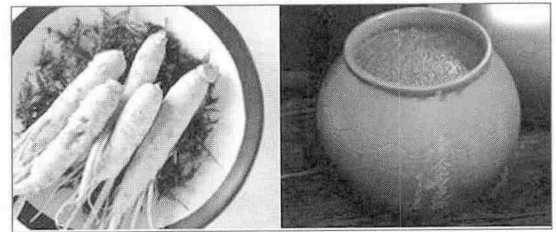
금년 수확기에 공공비축 미곡 43만톤을 매입하고, 2008년에 수입쌀 의무수입물량 29만톤을 수입하며, 관수용 등으로 71만톤을 판매, 2008 양곡연도 말에는 90만톤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수확기 대책을 별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부)

고추장·인삼제품 “국제식품 규격 초안 채택”

◆ 제3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 심의 통과



고추장과 인삼 제품이 국제적인 식품으로 공인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이달 초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3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과 인삼 제품 규격안이 5단계의 심의를 통과해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추장과 인삼 제품은 앞으로 2년 내에 아시아 식품규격으로 우선 등록된 후 일정 절차를 거쳐 국제 식품규격으로 전환된다.

특히 고추장은 우리 말 그대로인 ‘Gochujang’이라는 영문명으로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어 김치(Kimchi)에 이어 또 하나의 우리나라 고유 명칭을 가진 국제식품이 탄생할 전망이다.

그동안 고추장은 고추에 소금과 식초를 더한 핫 소스와 유사한 정도로 국제사회에 알려져 있었으나, 규격화 과정을 통해 고춧가루와 전분질을 주원료로 미생물 발효 및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세계 유일의 식품임을 알렸다.

또 인삼 제품은 고려인삼과 화기삼(서양삼)의 건조품과 추출액에 적용할 수 있는 통합된 규격안을 마련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삼을 약품으로 분류해 우리 인삼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제 식품

규격으로 채택되면 식품으로 공인되므로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는 유사 제품과 차별화된 우리 전통식품만의 규격을 제정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제적으로 규격화된 식품은 외국의 바이어나 소비자에게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무역 분쟁 해결의 국제적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㉞

〈출처 : 농림부〉

40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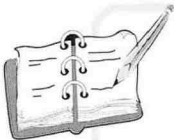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꿋꿋하게 맥을 이어온 40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계동향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kafarmer.or.kr,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067-01-224657 우 체 국 : 012211-01-000320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